

기후변화 중장기 전략 발표와 충청남도 대응

표정기 / 이상신

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, sinslee@cni.re.kr

- ◇ 12월 6일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「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」 및 「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」을 확정함에 따라
- ◇ 향후 조치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 정부정책 기조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위한 충남경제 피해최소화와 기회창출 마련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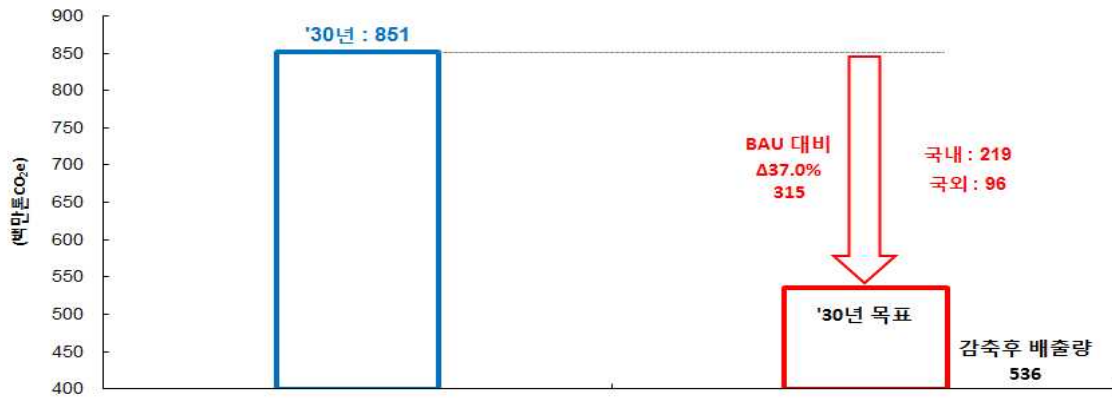
□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주요내용

-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제·환경·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
-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, 에너지효율 향상,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,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
-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

- ▶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
- ▶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·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
- ▶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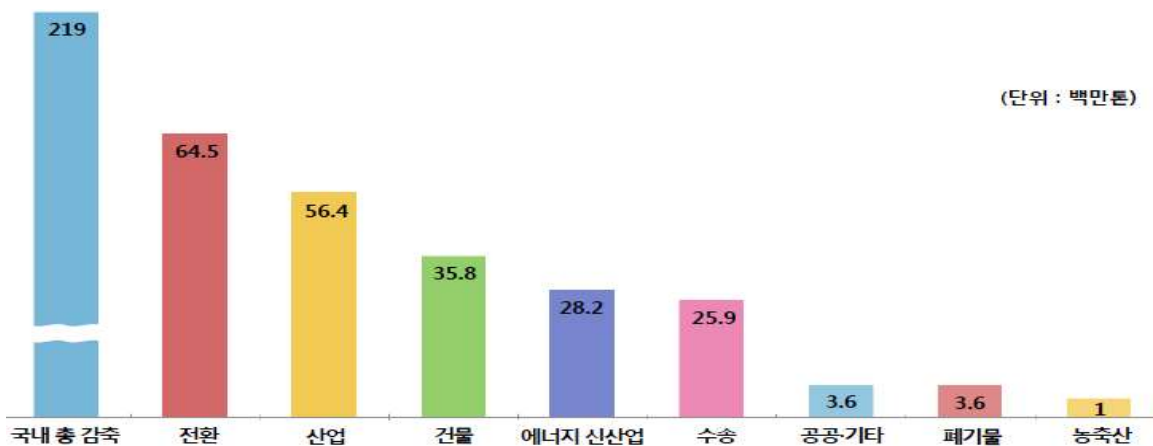
□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

-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 37% 감축목표 확정 · 당사국총회 제출(2015. 6. 30)
 - 기존 정부 제3안(25.7%) + 국제시장(배출권 구매, 상쇄 등) 활용 감축(11.3%).



[그림]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(국무조정실 보도자료, 2016. 12. 6.)

- 2030년 감축량 315백만톤 중 국내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(BAU 대비 25.7%), 국외에서국제시장 메커니즘(IMM)을 통해 96백만톤(11.3%) 감축을 계획



[그림]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(국무조정실 보도자료, 2016. 12. 6.)

- 총 감축량 중 전환(발전) 부문 64.5백만톤(부문 BAU 대비 19.4%), 산업 부문 56.4백만톤(11.7%), 건물(18.1%), 에너지, 수송 분야가 주 감축 대상으로 계획

- ▶ 전환(발전)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분리하여 적용
- ▶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, 감축량을 12% 이내로 고려

□ 국가 기후변화 대응 추진 전략

- 온실가스 완화外 다양한 분야(적용·재원·기술이전·역량 배양·투명성 등) 포괄
- ‘규제’ 위주의 완화 정책에서 과학기술 및 시장 중심의 전환
-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
- 민관 협업, 산업·비산업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
- 주기적 점검·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성과 보고·확산
-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에 대응

※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 일부인용

[표]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방안 (국무조정실 보도자료, 2016.12.6.)

분 야	현 재	향후 중장기 전략 방향
대응범위	온실가스 감축	감축·적용·투명성 등 포괄
감축수단	규제중심 (산업계 부담)	과학기술/시장 중심 (산업, 시장 진흥)
대응체계	단편적 대응 (개별부처 차원)	통합적 대응 (범부처 차원)
이행주체	정부주도 / 산업계 중심	민관협업/ 소부문 노력
평가체계	-	주기적 평가/환류
국제점검	-	5년 단위 이행실적 점검

- 국가는 ‘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’ 및 ‘기후변화적응 대책 추진’ 을 통해 저탄소 사회구현을 최종적 목표로 지향



[그림] 국가 ‘저탄소 사회 이행 단계’ 추진 방향 (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, 2016.12.6.)

□ 충청남도 현안에 대한 제언

○ 저탄소사회를 위한 충청남도의 기회

- 국내외 환경산업의 급성장, 국제사회의 녹색통상 증가로 녹색사업 판로개척 유리, 타 분야보다 높은 녹색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, 타도를 선도하는 수소경제체제 관련 기술 확보 등

○ 충청남도 정책방향에 고려되어야할 현안들

- 국가 감축목표를 고려한 「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(2010)」 수정·보완
- 도내 관련 산업을 통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「충남 온실가스 상쇄 가이드라인 수립」 및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 확대 필요
- 해외구매 부문 적용을 위해 충남도내 「민·관·산·학·연」의 자발적(인도적) 해외 지원프로젝트 분석을 통한 상쇄사업 발굴
- 도내 감축목표 달성의 첫걸음인 「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및 비산업부문 관리 철저」
 - ※ 2016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지원사업(도비지원사업) 9개 시·군 참여 중
- 전환(발전)부문 국가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「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」 수립 : 필요시 현재 5차 계획의 연구기간 연장 등 검토 필요
- 도내 경제·환경·사회의 조화를 위한 「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완화정책 개발」: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적응대책내 관련 사업·정책 개발 적용 필요

○ 저탄소사회와 고탄소사회를 위한 투자비용은 큰 차이가 없으며, CO₂ 증가가 도시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, 도시의 형태, 인프라, 경영방식 등의 차이가 성장을 좌우함(인용: NCE2015, the New Climate Economy)

- 경제투자가 저탄소사회를 완성해 주지 않음으로,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술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연구아이디어 개발 필요